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12/20 통권 165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세계화 속의 차이나 쇼크(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3개 업종 추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미사용자산 및 유류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 「불법유류대응T/F」 가동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 판매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임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일반증여와합산과세 또는 합산배제되는 증여의제〉

개념구분	과세이유, 계산방법, 근거규정
일반증여와 합산	실질증여, 일반증여(능동, 의도, 직접, 실물이전, 실현이익 등), 재산·이익의 무상 이전, 재산·이익의 낮은대가 이전받기, 높은대가 이전하기(3억이나 시가의 30% 여부로 판단함)
합산배제(상증법 제47조)	일반실질증여 아닌 증여추정, 증여의제, 수동적 · 간접적 · 파생적 증여임(미실현이익 등)
재산취득 후 가치상승	상증법 제31조제1항제3호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상승액이 3억 이상이거나 취득가액×30% 이상 상승
전환사채 주식 전환	상증법 제40조제1항제2호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각종 이익
전환사채의 특수양도	상증법 제40조제1항제3호 : 전환사채의 특수관계인 양도로서 양도일의 시가초과로 양도인이 얻은 이익
수증주식의 상장차익	상증법 제41조의3 : 기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초과이익
합병상장초과 이익	상증법 제41조의5 : 기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합병상장 초과이익
재산취득 후 가치증가	상증법 제42조의3 : 자력취득 무능력자의 재산취득 후 상황변경가치증가액
비적격자 재산취득	상증법 제45조 : 직업 · 연령 등 비적격자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	상증법 제45조의2 : 재산실제소유자가 명의를 차용등기한 경우
수혜법인 주주이익	상증법 제45조의3 : 특정 법인이 다른 수혜법인과 거래로 인한 지배주주의 이익
사업기회 주주이익	상증법 제45조의4 : 특정법인과 수혜법인간의 사업기회 제공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이익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54호 / 주간 51호

2023. 12. 20.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는행
-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일반 증여와 합산과세 또는 합산배제되는 증여의제	표지
C E O 에 세 이	세계화 속의 차이나 쇼크(1)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상대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시 - 부동산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미사용자산 및 유허자산의 감가상각방법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연금계좌 소득공제 -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8 9
직장인 Survival	1퍼센트의 희망만 보여도 매달러라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서면원천-658, 2023.03.28)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7, 2023.03.07)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300만원 상향 조정...공제한도 900만원까지	13
마케팅 Tax consulting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 판매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임	11
세무정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 「불법유류대응T/F」 가동	14 22 32 37
경영정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연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세계화 속의 차이나 쇼크(1)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한국 미래의 경영은 일곱 가지 쇼크를 겪었다. 세계화 쇼크, 정보화 쇼크, 민주화 쇼크, 고령화 쇼크, 자원무기화 쇼크, 여성세력화 쇼크 그리고 중국 쇼크다. 20세기 후반 동독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 이념 대국 소련이 해체되었다. 이에 질세라 중국의 개혁개방의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이렇게 미국은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20세기말 미국은 세계의 로마가 되었다. 과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는 서로 팽팽한 긴장과 경쟁이 있었다. 그래서 만행과 독주가 쉽지 않았다. 여러 면에서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그것을 양극체제(兩極體制)라고 한다면 21세기엔 일극체제(一極體制)가 된 셈이다. 경쟁과 견제가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는 곧 미국화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뒷면은 바로 미국 스탠다드였다. 미국자태에 거스르면 모두 적과 악(惡)이 됐다. 왕왕 독재는 오만과 편견을 부르기 마련이다. 세계의 독재가 된 미국도 그러한 점이 있다. 매사를 대화와 타협 그리고 거래와 비즈니스보다 힘으로 해결하려 들었다.

힘으로 구사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리더십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역사 속에서도 잘 알수 있다. 고려 때 ‘정중부의 난’인 ‘무인시대’의 흑정이 그랬다. 한국현대사에서도 쿠데타를 통해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있었다. 힘에 의한 통치란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 아무리 가난을 구제했다고 공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호도된 공치사다. 한국국민은 일제에 억눌려 살다가 열강에 의해 해방을 맞았다. 그래서 분단 조국끼리 한바탕 전쟁을 겪었다. 학생들의 4.19민주항쟁으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섰다. 하지만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해 구데타로 한국은 점령됐다. 철권, 억압, 중앙정보부 협박정치에 의한 압제로 세상은 바뀌었다.

국민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독재에 시달렸다. 민주국가에 ‘통치자’란 말이 웬 말인가. 국가경영, 국가경영자가 있을 뿐이다. 여하간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흑자의 말이다. 미꾸라지를 통에 넣어 싱싱한 채로 운반하려면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라고

한다. 메기의 괴롭힘을 당하는 미꾸라지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게 운동이 된다. 결과적으로 메기는 공헌이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런 이치라면 미꾸라지 국민이 메기인 정권의 괴롭힘에 감사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생존의 몸부림 그것이 국민소득 100달러를 1만 달러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괴롭힘을 덕으로 보려는 시각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을 강제 병합 후 36년간 수탈했던 일본도 한국 근대화는 자기들 공이라고 떠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진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정경유착의 덕을 본 일부 기득권(재벌과 일부 정치세력)과 그들에 의해 흑세무민 당하는 어리석은 일부 군중이 있을 뿐이다. 요즘도 박정희 향수를 불러 일으켜 이(利)를 취하려는 간교한 유신잔당이 있어 통탄스럽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경쟁자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이득을 취하려는 값싼 전술의 단맛을 즐기려는 가짜 보수가 아직도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힘은 심복의 총질을 낳았고(김재규의 총질) 또 국민을 향해 총질하는 만행(광주사태)을 낳았다. 그리고 사이비 보통사람(?)으로 국민을 속인 노태우 정권의 시기극을 겪었다. 바로 무인시대인 힘의 시대 그것의 실체였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8일 (금)	12월 11일 (월)	12월 12일 (화)	12월 13일 (수)	12월 14일 (목)
미	달	러	(USD)	1322.70	1307.90	1318.30	1315.70	1316.50
일	본	엔	(JPY)	919.15	903.09	901.93	904.76	923.76
영	국	파운	(GBP)	1665.21	1641.28	1654.73	1653.57	1661.75
캐	나	다	달러	(CAD)	972.65	963.00	971.02	974.61
홍	콩	달	러	(HKD)	169.33	167.47	168.90	168.55
중	국	원	(CNH)	184.27	182.55	183.31	183.08	183.00
유	로	화	(EUR)	1427.59	1408.22	1419.02	1420.69	1432.48
호	주	달	러	(AUD)	872.59	860.93	865.46	863.30
싱	가	폴	달러	(SGD)	987.49	974.84	980.77	980.80
말	레	이	시아링	(MYR)	282.99	280.39	281.54	280.86
기	트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 Q** 당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월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당기 장부에 로열티수입은 1월~12월까지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고, 외국납부세액은 1월~10월까지만 계상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시 1월~12월 외국납부세액이 모두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시점(3/31)에 12월분까지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 A**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공제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 1~12월분이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참고)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 Q** 2015년에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도 퇴사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요건이 무엇일까요?
- A**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626, 2017.06.22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상대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시

Q 당사와 거래중인 상대거래처에서 단가 인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 측의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22.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하였고 당사는 부가세 신고시 이를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당사는 매월 조기환급신고 업체)를 하였는데 질문인 즉 단가협의를 절충이 되지 않으면 1기 확정 신고기간에도 당사가 지금처럼 대응해도 될런지 여부입니다.

A 공급가액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 신고반영한 뒤,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귀사의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신고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만,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Q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공제가 100% 가능한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업의 경우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과 규모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이월결손금 공제 100% 적용도 가능합니다.

미사용자산 및 유헴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유형자산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취득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자산이나 가동을 중단한 자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회계상 미사용자산 및 가동중단 자산도 감가상각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현행 기업회계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한 뒤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가동중지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사용 자산 또는 가동중지 자산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미사용 자산, 장기간 가동중지 자산, 단기간 가동중지 자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감가상각을 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회계반영을 하면 된다.

◇ 일반기업회계 제10장 유형자산

10.35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무상으로는 일시적 유헴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인정함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시적 유헴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하지만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및 취득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자산은 일시적 유희설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다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가동중지에 있는 유희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자산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후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미사용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에 따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미사용자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❶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희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 서면2팀-1107, 2006.06.1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 및 장치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유희설비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971, 2005.12.05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희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질의한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 있는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연금계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봉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최대 600만원까지	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		13.2%	79만2000원

연금저축 + IRP

연봉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최대 900만원	16.5%	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000원



벤처기업 관련 소득공제 현황

투자금액 별 구간	세액공제율(% , 25년 12월 31일까지)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①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②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①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 2023년 10~12월 에 납부한 조합비 15%(1000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000만원 이하)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 → 4억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아파트 가액별 보유세 변화

가액구간	2020년	2023년	감소율
3억 미만	26만	15만4000	40.9
3억 ~ 6억 미만	92만7000	51만8000	44.1
6억 ~ 9억 미만	207만3000	114만1000	45
9억 ~ 12억 미만	360만1000	197만3000	45.2
12억 ~ 15억 미만	588만9000	306만1000	48
15억 이상	1387만6000	817만2000	41.1

단위 : 원, %



1퍼센트의 희망만 보여도 매달려라

세계적인 국제사이클경기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2연패를 달성한 미국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은 ‘20세기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사건’이라고 할 만큼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보여준 인물이다. 그는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며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지만 어머니와 사이클이 있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던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20세에 ‘US 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국제사이클경기인 투르드프랑스에서도 세계 최초로 21세라는 나이에 우승하는 등 탄탄대로였다. 하지만 25세 때 큰 위기가 닥쳤다. 고환암에 걸렸고, 그것도 폐에까지 전이된 3기였다. 불행한 어린시절을 보냈기에 훌륭한 아빠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컸던데다 세계 5위 안에 들 수 있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은 큰 힘이 되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는 항암치료를 하면서 매일 사이클 연습을 했다.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암을 이기고 다시 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이클에 대한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의지는 주위에 알려져 암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회사가 나타났고, 투르드프랑스에서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는 마침내 다시 우승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생의 진정한 실패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한다. 어떤 것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은 언젠가 성공하게 마련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는 데 있다.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즈가 불우한 환경에 좌절하여 펜을 꺾었다면 우리는 그의 소설을 읽지 못했을 것이다. 또 에디슨이 실패한 실험에 좌절했다면 우리는 그의 아이디어가 탄생시킨 많은 발명품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계속적 · 반복적으로 상품 판매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임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서면원천-658, 2023.03.28

Ⅰ 질 의

- 질의자는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을 누구든지 소개 · 판매하는 경우 소개료를 지급하고자함

질의

- 상품판매 수수료가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및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과세최저한 여부 판단 시 동일인에게 지급한 모든 수수료를 합산해야하는지

Ⅱ 회 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 건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547, 2023.03.15

Ⅰ 질 의

- (질의1) 상속개시 후 공동대표자로 취임한 가업상속인 2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인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 시 해당 가업상속인 2명을 포함하는지 여부
- (질의2) 해당 가업상속인 2명이 '기준고용인원'에 포함된다면,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 계산 시에도 포함하는지 여부

Ⅱ 회 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하 "가업기업"이라 함)의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고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이하 "산정기간"이라 함)의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공동상속인의 총급여액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기간의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에서는 제외(단,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함)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7항에 따라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인이 가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7, 2023.03.07

■ 질 의

-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공사가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부가법 상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는지

■ 회 신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력을 공급받고, 해당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이하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함에 있어,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조의3제6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납부할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 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세제과-46, 2023.01.26

■ 질 의

-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회 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300만원 상향 조정...공제한도 900만원까지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영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 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

4%)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3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 금융지원, 중소 넘어 중견까지... 신보 보증 500억원으로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CBO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견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를 주로 생산하면서 대기업의 공급처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최근 경영 여건상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3고(高) 현상, 공급망 불안정, 우수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 등을 꼽았다.

아울러 중견기업들이 성장하고 신산업과 해외로 적극 진출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금융이 중견기업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유통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국세청, 2023. 12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발급의무제도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년 발급금액은 156.2조 원으로 시행 첫해인 18.6조 원보다 8.4배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20년) 123.0 → ('21년) 142.0 → ('22년) 156.2 → ('23년 11월) 149.8

□ '24. 1. 1.부터는 유통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①유통소매업 ②주차장 운영업 ③통신장비 수리업 ④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⑤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⑥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⑦자동차 중개업 ⑧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⑨체인화 편의점 ⑩대형마트 ⑪백화점 ⑫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⑬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 1. 1.부터 기지정되었음

□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24.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질세” 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서,
 -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05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¹⁾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²⁾하고 있습니다.
 - 1) ('10년) 거래 건당 30만 원 → ('14년 7월 이후) 거래 건당 10만 원
 - 2) 의무발행업종(개) : ('10년) 32 → ('21년) 87 → ('22년) 95 → ('23년) 112 → ('24년) 125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24. 1. 1.부터 아래의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업종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	47212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주차장 운영업 (630303)	52915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95120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95399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업종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52912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체인화 편의점 (521992)	4712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대형마트 (521912)	4711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백화점 (521910)	47111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성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47119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합니다.

3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 (사례①)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사례②)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5 현금영수증의 생생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 ('20년) 123.0 → ('21년) 142.0 → ('22년) 156.2 → ('23년 11월) 149.8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편의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시스템 도입('19.7월), 손택스 발급시스템 확대('21.1월),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22.7월)를 도입하였습니다.
- 올해에도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23.8월)하였으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과 수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오니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0. 4. 1.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 7. 1.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2014. 1. 1.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 6. 2.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2016. 7. 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 7. 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 1. 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 1. 1.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 1. 1.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 1. 1.	8개 업종 추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3. 1. 1.	17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2024. 1. 1.	13개 업종 추가	·육류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붙임 2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맹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붙임 3 -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Q2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3 '24.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수리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Q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¹⁾, 손택스²⁾, ARS³⁾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수정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 2) 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 3) ☎126 > 1(홈택스 상담)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현금영수증 발급)

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 국세청, 2023. 12

I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개 요

양도손익 =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 제44조 제1항).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양도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금 등 +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이란 다음의 ① ~ ③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영 제80조 제1항 제2호).

①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이하 “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

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① + ②

- ① 교부한 합병교부주식의 교부가액
- ②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계산한 금액

- ②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③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이 경우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이 승계한 순자산의 시가가 아닌 합병대가의 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교부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또한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합병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은 순자산 양도가액에 가산한다.

3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text{순자산 장부가액} = \text{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 - \text{부채의 장부가액 총액} + \text{법인세 환급액}$$

가. 개요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더한다(영 제80조 제2항).

나. 장부가액의 의미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므로,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유보)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비적격합병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사항은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양도손익을 계산한 후 반대 세무조정(추인)을 반영하여 양도손익을 산정하며,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인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므로, 반대 세무조정(추인)을 반영하지 않고 양도손익을 산정하면 된다.

4 주요 질의·답변

Q. 합병대가(양도가액)의 평가기준일 및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추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부담한 법인세 납부액의 합병대가 포함 여부

A.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은 합병등기일이며, 사후관리 추정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부담한 법인세 납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양도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합병교부금 등과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text{양도가액} = \text{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text{합병교부금 등} + \text{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전액을 상장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합병교부 주식의 가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을 의미하며, 합병 시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던 중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 추정 요건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규 서면-2022-법인-2188, 2022.9.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후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합병대가”)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로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Q. 순자산 장부가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가 세무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순자산 장부가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세무상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에서 ‘장부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유보)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하는 것이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순자산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예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 2014.2.19.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19.2.12. 이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 제1항(‘10.12.30.이후: 제2항) 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한편,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법 제21조 제1호), 회계상 계상한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이에 대응하는 미지급 법인세도 세무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규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2015.10.5.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Q.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

A.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함

합병·분할 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분할 시점에 남아있는 세무조정사항을 별도의 세무조정으로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피합병·분할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를 승계받은 합병·분할신설법인도 합병·분할시점에는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기초잔액에 기록하고 사후관리 하다가 실제 추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인함으로써 합병·분할신설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된다.

합병·분할 시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피합병·분할법인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피합병·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대의 조정을 통해 추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합병·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사후관리할 필요도 없고 추후 추인할 수도 없다.

유보 승계 여부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과 합병법인의 합병승계자산 처분이익을 비교해보면, 유보금액 만큼이 어느 단계에서 과세될지에 대한 과세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 과세소득은 동일하다.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에 따른 과세효과>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구분	피합병법인 (합병 양도손익)	합병법인 (승계자산 처분손익)
여	(+)유보	증가	감소(-추인)
	(-)유보	감소	증가(+추인)
부	(+)유보	감소(-추인)	증가
	(-)유보	증가(+추인)	감소

예시

- ▶ 피합병법인인 A법인은 자산(회계상 장부가액 50, 세무상 장부가액 60, 시가 100)을 비적격합병으로 100에 합병법인인 B법인에 승계하였고, 합병 후 합병법인(B법인)은 해당 자산을 150에 처분하였음

- ① 세무조정사항(유보)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합병 시점	자산 처분 시점
<p>회계상 양도손익 50 (피합병법인)</p> <p>50 (회계) 60 (세무) 100 (양도가)</p> <p>↑ +유보</p> <p>(소득) 피합병법인 40*</p>	<p>회계상 자산처분이익 50</p> <p>100 (취득가) 150 (처분가)</p> <p>세무상 자산처분이익 50 = 50 + 0(유보 추인 ×)</p> <p>(소득) 합병법인 50</p>

* 회계상 양도손익 50(100 - 50) - 10(미승계 유보 추인)

- ② 세무조정사항(유보)이 승계되는 경우 :

비적격합병 시 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나, 과세체계 이해를 위해 승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교함

합병 시점	자산 처분 시점
<p>회계상 양도손익 50 (피합병법인)</p> <p>50 (회계) 60 (세무) 100 (양도가)</p> <p>↑ +유보</p> <p>(소득) 피합병법인 50*</p>	<p>회계상 자산처분이익 50</p> <p>100 (취득가) 150 (처분가)</p> <p>세무상 자산처분이익 40 = 50 + △10(유보 추인)</p> <p>(소득) 합병법인 40</p>

* 익금산입 유보 10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므로 유보 추인 없이 양도손익 산정

따라서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추인) 없이 순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한다(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2015.10.5.).

Q.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방법

A.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한다.

$$\text{양도손익} = \text{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text{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 장부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한편, 현행 규정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의 범위에 대해 부채의 장부가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됨에 따라 승계되는 부채의 가액은 실질적으로 양도대가를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피합병법인의 부채의 장부가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이 200, 피합병법인의 자산 장부가액이 200, 부채 장부가액이 300인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300[양도대가(200) - (자산장부가액(200) - 부채장부가액(300))]이다.

참고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면, 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합병매수차손’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는 그 차액(합병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text{합병매수차손} = \text{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 < \text{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

이는 합병매수차손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예규 법인세과-181, 2012.3.13.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하는 것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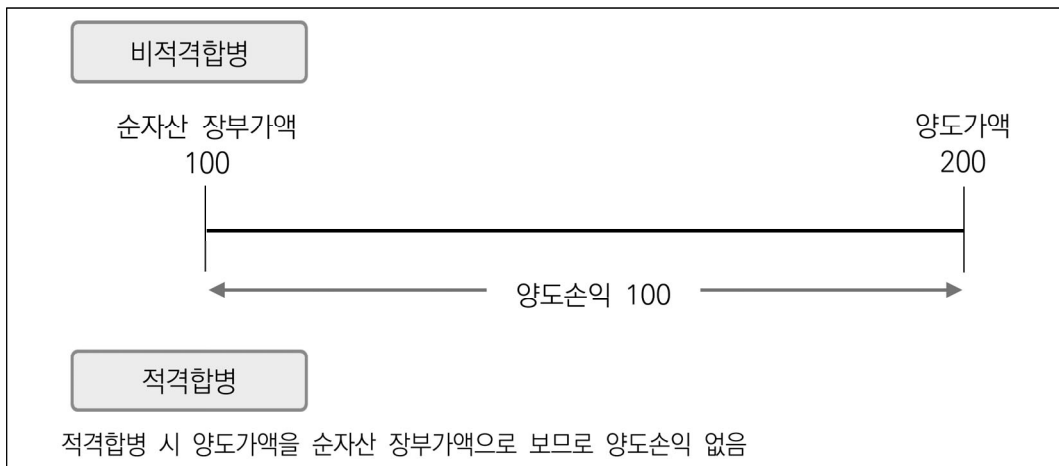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개요

양도손익(0) =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순자산 장부가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합병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한편,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과세이연된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상당액은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며,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V.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 사례 예시

A법인(피합병법인)은 2023년 7월 1일에 B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A법인의 합병 당시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A법인(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장부가액)	(시 가)		(장부가액)	(시 가)
유동자산	500	500	유동부채	300	300
투자자산	150	300	고정부채	400	400
토 지	200	400	자 본 금	100	
건 물	190	300	주식발행초과금	100	
기계장치 등	100	200	기타자본잉여금	20	
			이익잉여금	220	
계	1,140	1,700	계	1,140	700

B법인은 A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신주(액면가액 100, 시가 500)를 교부하였으며, B법인의 합병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자산	1,700	(대변) 부채	700	
		자본금	100	} 신주 시가 500
		주식발행초과금	400	
		염가매수차익(수익)	500	

A법인과 B법인 간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일 경우 피합병법인(A법인)은 60의 양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적격합병일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은 0이 되어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격 여부에 따른 A(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비적격합병(60)	적격합병(0)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500 - 440(자산 1,140 - 부채 700)	순자산 장부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440 - 440

3 주요 질의·답변

Q.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적격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A.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는 선택사항으로,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 등 일반적인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과세이연을 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예규 서면-2016-법인-6020, 2017.3.29.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Q.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미제출시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A.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 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영 제80조의4 제1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병과세특례신청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A법인(피합병법인)은 B법인(합병법인)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A법인은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〇〇〇억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과세관청은 A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A법인(원고)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른 합

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합병과세특례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인하고,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울산지방법원)은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670, 2023.8.24.

원고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합병에 관한 서류가 첨부된 법인세 신고자료를 통해 합병과세특례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특례적용의 선택여부를 명확하게 하여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특례적용에 따른 과세이연 및 이연된 과세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합병과세특례신청서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납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거나 그 확인을 위한 보완을 요구할 의무도 없으며, 원고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의무 불이행의 제재로 원고가 이미 얻은 과세특례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닌 누락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 국세청, 2023. 12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3년도 제2차 회의를 12. 1.(금)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②세무조사 운영방향, ③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습니다.

- ①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
 -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②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 세무조사 규모 축소*,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실시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고,
 - * 총 조사건수(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③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관련하여,
 -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실적 개선사항(기한 내 처리율 증가, 평균처리일수 감소)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는 12. 1.(금)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13년에 발족하여 국세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안을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모범 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및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참여 중

- 이 날 행사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신입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목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

-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 '23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준 국세청 모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안건은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하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①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② 세무조사 운영방향, ③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불복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논의내용

안전 1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그간의 추진성과

- (지원체계) 본청과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실시
 - 분야별 세정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출범('23.3월)
- (세정지원 내용)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검증 부담 및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각종 도움정도 제공 등 분야별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

< 주요 세정지원 내용 >

- ❶ (유동성 지원) 9,162개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1.7조원)
 -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부가세 조기환급 (3~9월 신고분, 14,911개 법인, 1.5조원)
- ❷ (검증부담·불확실성 해소)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APA·상호합의 신속 추진
- ❸ (도움정보 제공)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수출지원(4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9월)하고 서면질의 제출시 최우선 처리

주요 추진과제

- (세정지원 지속)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강화
 - *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지원계획 마련) '23년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24년에도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법인세 신고시 세정지원 대상임을 사전 안내 등

안건 2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

그간의 추진성과

- (조사규모 축소) 복합 경제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하여 연간 총 세무조사 규모를 지속 감축하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
 - * 총 조사건수(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조사부담 완화)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5일→20일)하고,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실시
 - 간편조사* 확대, 전 세무관서에서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운영
 - *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건수(건) : ('22) 1,569 → ('23. 목표) 1,600 이상
- (탈세 엄단) 불공정 · 민생침해 · 역외 ·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

구 분	주요 탈루 유형
불공정 탈세	· 전환사채 등 신종금융상품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
민생침해 탈세	·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에게 고리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등
역외 탈세	·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등
신종산업 탈세	· 온라인플랫폼 기반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들의 수입신고 누락 등

- (적법절차 준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괄적 자료요구 금지, 종결 후 「조사결과 설명회」 신설 등 적법 ·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한 절차 개선

주요 추진과제

- (적발확률 제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 지속 추진
- (범칙조사 강화)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하여 범칙처분을 끝까지 유지
- (소통 강화) 납세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 * 「조사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유관기관(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간담회 실시 등

**안건 3****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그간의 추진성과**

- (신속한 불복처리) 기한내 처리율¹⁾ 및 평균처리일수²⁾ 실적 개선('23. 10월)
 - 1) (기한내 처리율) 이의신청(87.6%→96.8%), 과세전적부심(87.0%→89.5%), 심사청구(77.0%→79.2%)
 - 2) (평균처리일수) 이의신청(46일→37일), 과세전적부심(31일→29일), 심사청구(95일→92일)
- (심사 공정성 제고) 국세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세무·회계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위촉하여 내실있게 운영
 - * (국세청) 24명 → 30명, (지방청) 20명 → 25명, (세무서) 16명 → 20명
- (국선대리인* 지원)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 *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326명으로 구성, 금년도 444명의 영세납세자 지원('23년 10월 기준)

주요 추진과제

- (소액사건 신속처리)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¹⁾의 기준금액 상향²⁾ 법령 개정 추진
 - 1)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 2) (현행) 3천만원 미만 → ('24년 개정) 5천만원 미만
-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하여 신속·공정성 제고
 - *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개선)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재결정 선택권 확대)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정성 강화
 - * 본청 청구대상 : (현행)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개정) 청구금액 5억원 이상
- (권리구제 강화)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홍보 강화
 - * (기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확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불법유류대응T/F」 가동

- 국세청, 2023. 12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불법유류대응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3.9월 발족)

Ⅰ 주요 조사사례 Ⅰ

1. 가짜석유 제조 일당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일당 적발
2. 실행위자 적발	노숙자, 생활빈곤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수차례 모자바뀌쓰기를 일삼은 먹튀주유소 실행위자를 끈질기게 추적·고발
3. 면세유 부정유통	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고발
4. 조기 폐쇄 조치	계속사업 중인 개업 1년 미만 먹튀 혐의 주유소 10곳을 신속하게 폐쇄 조치하여 먹튀 행위 확산 조기 차단
5. 현장유류 최초 압류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과 공조, 탱크로리 6대(2억원 상당) 분량의 현장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조세채권 확보

-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유류 유통 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 (조기 대응체계 마련)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여부 검증 강화, 먹튀장소 재개업자·바지사장 혐의자 등 상시·특별관리, 단속시기 최대 4개월 단축
 - (면세유 통합관리)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
 - (신종 탈세 대응) 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불입 사례)



I 고질적 먹튀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 착수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석유류 불법유통은 과세기반을 벗어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론,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영업하고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하고 있어 세금징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근 5년간 400건 적발 786억 원 부과 → 세금 징수 3억 원

I 먹튀주유소 불법유통 유형 (예시) I

① 가짜석유 제조·판매	차량용 경유에 값싼 등유를 혼합하여 저가에 판매
② 무자료 유류 판매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

-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지난 9월 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유류 대응T/F」를 발족하였으며,
- 현행 유류 유통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주요 탈루 유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II 불법유류 유통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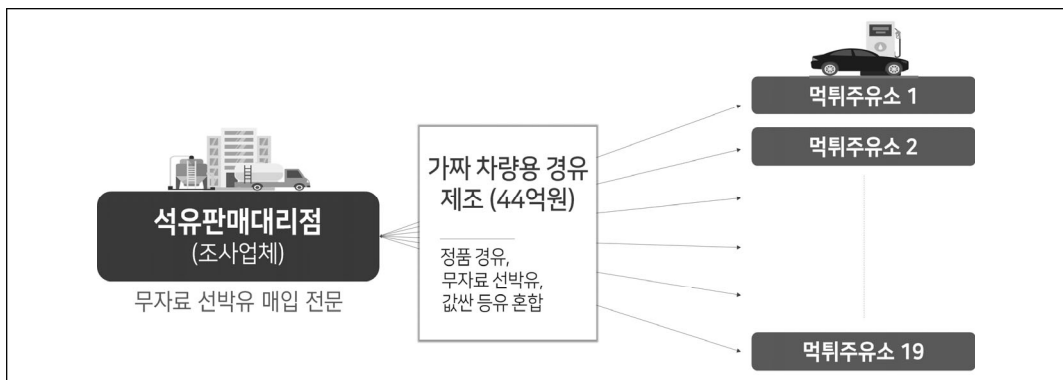
- 국세청은 금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불법유류대응T/F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하여 ①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② 명의 위장 혐의자, ③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④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유류 유통의 고질적 문제점과 현행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조사사례 |

적발 유형	혐의 내용
01 가짜석유 제조 일당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일당 적발 * 무자료매입 · 매출, 조세포탈 →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실행위자 고발
02 먹튀 실행위자	노숙자, 생활빈곤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수차례 모자바꿔쓰기를 일삼은 먹튀주유소 실행위자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고발 * 무자료 매입 54억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실행위자 고발
03 면세유 부정유통	브로커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고발 * 무자료 매입 100억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실행위자 고발
04 조기 폐쇄 조치	계속사업 중인 개업 1년 미만의 먹튀 혐의 주유소를 신속하게 폐쇄 조치하여 먹튀 행위 확산 조기 차단 * 10개 주유소 : 6개월 미만 6개, 1년 미만 4개
05 현장유류 최초 압류	한국석유관리원 및 경찰과 공조, 탱크로리 6대(2억 원 상당) 분량의 현장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조세채권 확보 * 평택 28㎥(중부청), 세종 40㎥(대전청), 칠곡 16㎥(대구청), 아산 43㎥(광주청)

사례1 19개 먹튀주유소에 가짜석유를 제조·공급한 일당 적발

-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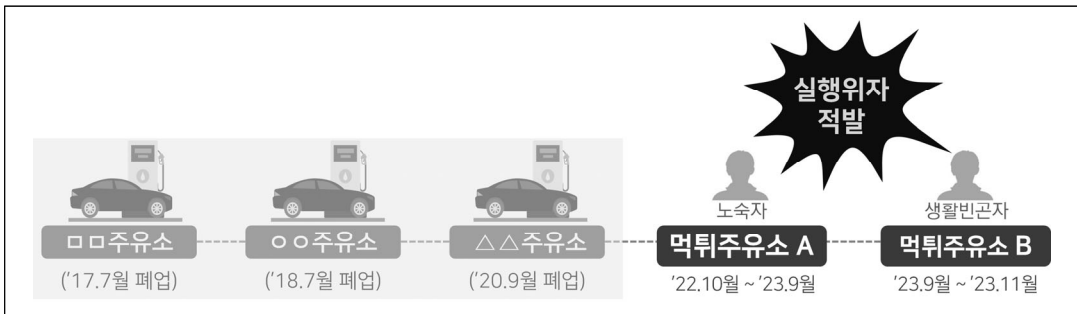
-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판매대리점과 19개의



- 먹튀주유소를 설립하였으며,
- '21.6월부터 '22.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하여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일당이 운영하는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 심지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피자금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대신 처벌받을 사람' 2명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행위자 이모씨를 추적해서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사례2 노숙자·생활빈곤자의 처지를 악용한 먹튀주유소 실행위자 적발

- 기초생활 조차 힘든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습니다.



- 조사착수 시 먹튀주유소 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주1) 명의로 사업 중이었으나,
-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 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 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 (노숙자) 음식도 씹을 수 없을 만큼 상실된 치아를 고쳐볼 요량으로 월 120만 원을 받고 명의 대여 → 조사업체 소득발생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까지 상실

- (질문) 왜 명의를 빌려주셨습니까?
- (답변) 저는 실제 다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가 안좋아서 먹을꺼 씹을 수도 없고 이빨이라도 고쳐볼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_질문·답변 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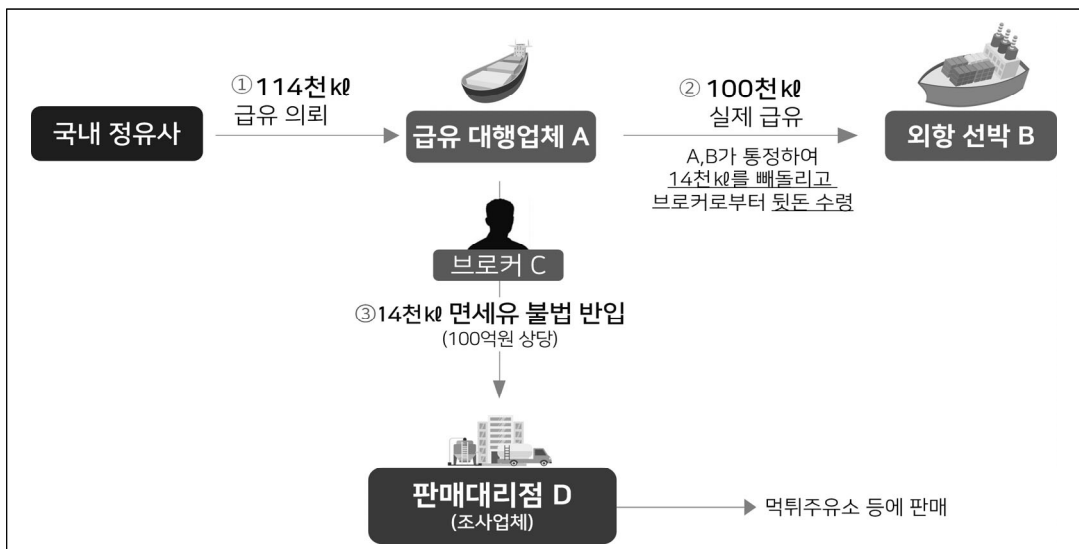
- 하지만, 착수 당일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하였습니다.

- 실행위자 김모씨에게, 매출누락 68억원 ·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례3 고액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한 판매대리점 적발

-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대리점 D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114천kℓ를 급유하도록 지시를 받은 급유대행업체 A는 브로커 C로부터 뒤통수를 받을 목적으로 외항선박 B와 공모하여 14천kℓ를 빼돌렸습니다.
- 이를 통해 조사대상 업체인 판매대리점 D는 브로커로부터 빼돌린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짝 가격에 무자료 매입 (시가 100억원 상당)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 거래 당사자 간 통정에 의한 고액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습니다.



사례4 신규 10개 먹튀주유소 조기 폐쇄 조치

- 먹튀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 그동안 먹튀주유소들이 단기간 영업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잠적하다보니 조기 차단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개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폐쇄 조치함으로써 불법유류 유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사례5 현장 유류를 최초 압류하여 조세채권 확보

- 조사착수 당일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하여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kl(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처음 압류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23.9월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시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먹튀 혐의 주유소 사전 답사, 탱크로리 운반업자 및 저유소 섭외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당일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긴급 요청한 후 현장유류를 압류하였습니다.
-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여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먹튀주유소 단속 시 현장유류 압류를 매뉴얼화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1 먹튀주유소 대응체계 개편

- (사업자등록 검증 강화) 현재는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별관리 대상 운영) 먹튀장소 재개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전담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징후 발견 시 즉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 대상	
① 먹튀장소 재개업자	② 무자격 개업 등 명의위장 혐의자
③ 제보·정보 업체	④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 먹튀 혐의 주유소

- (대응시기 단축) 지금까지는 대부분 먹튀주유소가 폐업한 후 대응하여 실행위자 및 무자료 원천을 적발하는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전산분석 체계를 개선하여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②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4.3월)

- 아울러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면세유 유통의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 <4대 조합> 농·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중앙기관>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 그동안에는 면세유 거래자료 등을 수동으로 수집·분석하여 단발적으로 점검·관리해 왔으나,
- 앞으로는 각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하여 ①면세유 부정유통, ②무자료 거래, ③면세유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등 면세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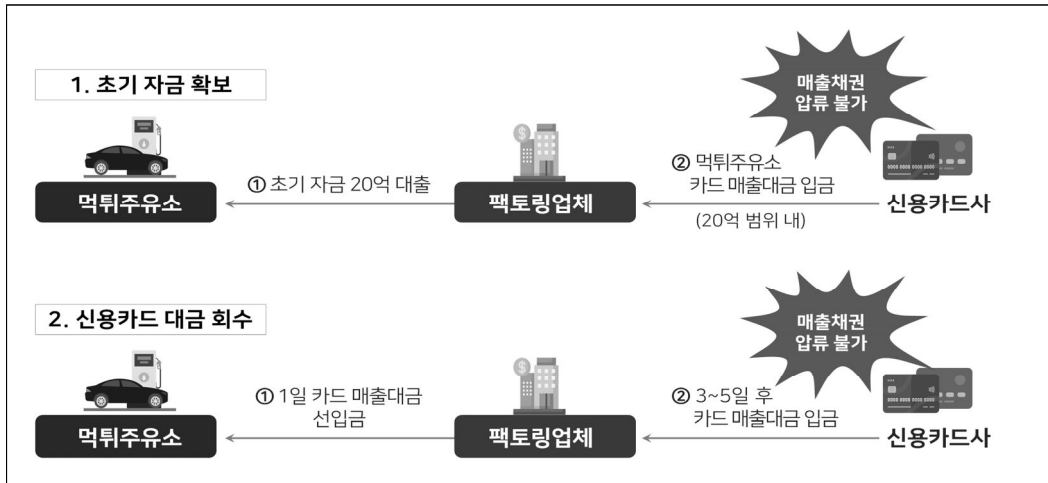
* 면세유 부적격 혐의자는 해당 면세유 관리기관에 통보할 예정

Ⅰ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Ⅰ



③ 신종 탈세수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최근 먹튀주유소는 세금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이라는 신종 수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 ① (초기 자금) 먹튀주유소 개업 시 향후 발생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사로부터 초기자금을 대출받고, 팩토링사는 주유소 1일 카드매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입금받아 대여금을 회수합니다.
- ② (1일 주유소 매출) 대여금 회수 후에는 당일 신용카드 대금을 먹튀주유소에 선지급하고 3~5일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고 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A팩토링사 표본조사 결과

- ◇ 최근 3년간 A팩토링사와 계약한 394개 주유소 중,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먹튀 혐의 주유소는 94개(24%)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이릅니다.

- 세금 한 톨 내지 않는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해도 팩토링사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IV

「불법유류 대응 T/F」2차 회의 (23.12.11.)

- 국세청은 12월 11일 「불법유류대응T/F」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조사 내용과 향후 대응 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불법유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으며,

-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T/F 위원들은 국세청의 먹튀주유소 조사 및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불법유류 대응 강화에 공감하면서,
 - 불법 유류 유통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으며,
 - 4대 정유사들은 외항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급유대행업체와 판매대리점을 관리·감독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거래 투명성이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불법유류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감독원, 2023. 12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2016년부터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6월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에 기초한 윤한홍 의원 발의안과 김한규 의원, 강민국 의원 발의안을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상정

첫 번째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

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하여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

은행	지주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 증금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원↑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미만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원↓

* □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 2단계(1년) → □ 3단계(5년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두 번째로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하였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관리조치를 미실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이는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신설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라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고유의 자기책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제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결과책임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영역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제재와 관련하여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



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초기 제도 도입 및 준수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규정 마련과정에서 광범위한 금융권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지속 소통하고 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지속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www.eAnSe.com



세련된 디자인, 알기쉬운 메뉴 체계, 모바일 버전 제공



600여개의 각종 회계·세무·재무 동영상 강의



회계·세무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30분 내 Q&A



안세재경저널·세계재경저널 모든 내용 수록

모든 회원은 eAnSe.co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